<2022 지방직 7급 해설>

<출제비중>

총론	정책	조직	인사	재무	환류	지자
4	4	3	3	3	1	2

<총평>

지난 해에 비해 어려운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요약노트와 추가로 정리해드린 새행정학 3.0 추가 내용을 정리하셨다면 대부분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렵게 느낄만한 문제는 10번(재정준칙), 16번(넛지이론), 18번(지방자치에 관한 이론), 19번(정책학의 발전과정), 20번(탄력세율제도)입니다.

10번의 경우, 2022 경찰승진 시험에 출제된 바 있는 주제로 제 기본서 등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번의 경우, 새행정학 3.0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새행정학 3.0에서 추가된 내용은 따로 정리해드린 바가 있고, 앞으로도 추가된 주제들을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8번의 경우, 피터슨의 도시한계는 2019 지방 7급 지방자치론에서 출제된 바 있습니다. 지방 7급 지자론을 준비하셨던 분이라면 풀만한 문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19번의 경우, 정책학의 발전과정은 학습하는 범위의 주제이나,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아 다소 문제 풀이에 어려움을 느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20번의 경우, 제 요약노트 <심화+>에 정리된 내용이었습니다. 7급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고득점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1. 애플비(Appleby)가 주장한 정치행정일원론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① 행정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관리를 핵심으로 한다.
② 행정은 민의를 중시해야 하며 정책결정과 집행의 혼합작용이다.
③ 시간과 동작연구를 통한 직무의 전문화는 행정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④ 고위 관료가 능률적으로 관리해야 할 행정원리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 등이 있다.

<해설>

① (X) 행정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관리에 중점을 경영적 성격을 강조하는 정치행정이원론(공사행정일원론) 입장과 관련이 있는 설명입니다.
② (O) 애플비는 '거대한 민주주의'에서 행정이 스스로 부과한 정치와 행정 사이의 경계를 허물면서, 정치는 독립적이고 어떻게든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은 허구적인 생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대행정은 정책형성이라고 보면서 정치와 행정은 연속적·순환적 관계임을 강조하고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입장입니다.
③ (X) 시간과 동작연구는 테일러에 대한 설명입니다.
④ (X) 귤릭은 'Papers of the Science of Administration'(1937)에서 행정의 제1공리로 능률을 강조하며 능률적인 구조설계(POSDCoRB: 최고관리자의 기능, 하향적 조직 편성)를 강조하였습니다.

※ POSDCoRB:Planning(기획), Organizing(조직), Staffing(인사), Directing(지시), Coordinating(조정), Reporting(보고), Budgeting(예산)

답: ②

02.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행정학은 행정의 적실성 회복을 강조한다.
② 발전행정론은 환경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③ 공공선택론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공유된 가치를 관료가 협상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설>
① (O) 신행정학은 사회적 적실성(실제에 들어맞다)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O) 발전행정론은 발전도상국의 국가발전을 위한 행정을 연구해 온 행정학의 학파입니다. 발전행정론은 비교행정론의 한 영역 또는 분과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문화권을 달리하는 나라들의 행정을 비교연구하는 사람들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행정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후진국 또는 발전도상국의 국가발전과 행정발전의 연구에 깊이 빠져들면서 발전행정론이 형성되었습니다. 문화권에 따른 행정을 비교연구했다는 점에서 환경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O) 공공선택론에서는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④ (X)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공공서비스론에서 관료들은 과거와 같이 시민을 통제하는 대신 시민들로 하여금 공동의 이해관계를 표현하게 하고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중재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답: ④

03. 민간위탁(contracting ou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민간부문에 맡기고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② 비영리단체는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정부의 직접공급에 비해 고용과 인건비의 유연성 확보가 용이하다.
④ 대표적인 예로는 쓰레기수거업무나 도로건설업무가 있다.

<해설>
① (O) 민간위탁이란 외부계약 방식을 통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사무를 민간부문에서 대신 수행하도록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X) 민간위탁 방식은 정부가 민간기업이나 비영리조직과의 계약을 통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비영리단체도 민간위탁의 대상이 됩니다.
③ (O) 민간위탁의 효과로는 서비스 생산 혹은 관련 행정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절감, 신속한 업무 처리와 업무량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 정부기구와 인력 및 예산의 감축과 간소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답: ②

04. 비용효과(cost-effectiveness)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대안의 비용과 효과는 모두 화폐단위로 측정된다.
② 분석결과는 사회적 후생의 문제와 쉽게 연계시킬 수 있다.
③ 시장가격의 메커니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④ 국방, 치안, 보건 등의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해설>
① (X) 비용효과분석은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지 않고 둘 이상의 사업을 비교하여 비용이 적거나 효과가 큰 사업을 선택하는 분석기법입니다.
② (X) 비용효과분석의 단점은 분석결과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후생의 문제와 쉽게 관련시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비용과 편익의 측정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정책의 비용이 편익보다 큰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③ (X), ④ (O) 비용효과분석은 목표달성 정도를 화폐가치로 표현할 수 없는 사업에 자원을 어떻게 가장 능률적으로 투입할 것인가의 문제에 적용하기 좋은 사업으로서 특히, 국방, 경찰행정, 운수, 보건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답: ④

05. 예산의 분류 방법과 분류 기준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분류 방법	분류 기준
① 기능별 분류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얼마를 쓰느냐
② 조직별 분류	정부가 무엇을 구입하는 데 얼마를 쓰느냐
③ 경제 성질별 분류	누가 얼마를 쓰느냐
④ 시민을 위한 분류	국민경제에 미치는 총체적인 효과가 어떠한가

<해설>

① (O) 기능이란 '일정한 분야에서 하는 역할과 작용'을 의미합니다. 기능별 분류는 무슨 일을 하는 데 얼마를 쓰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②, ③ (X) '정부가 무엇을 구입하는 데 얼마를 쓰느냐'는 예산을 지출 대상(품목)별로 분류하는 방법인 품목별 분류에 해당하고, '누가 얼마를 쓰느냐'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조직 단위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인 조직별 분류에 해당합니다.

④ (X) '국민경제에 미치는 총체적인 효과가 어떠한가'는 예산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예산을 경제적 성격에 의해 분류하는 방법인 경제 성질별 분류입니다. 참고로 시민을 위한 분류는 기능별 분류를 의미합니다.

답: ①

06. 정책결정모형 중 점증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대안을 모두 분석하기보다 한정된 정책대안에 주목한다.
②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성이 있다.
③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인정하므로 급격한 개혁과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혁신적 정책결정을 설명하기가 용이하다.
④ 정책결정에서 집단 참여의 합의 과정이 중시되고 목표와 수단이 탄력적으로 상호 조정된다.

<해설>

① (O) 점증모형에서는 몇 가지 대안만 한정시켜 분석하고, 조금씩 수정해 나갑니다.

② (O) 점증모형에서는 불완전한 예측을 전제로 하여 정책대안을 실시하여 보고 그때 나타나는 결과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 부분만 다시 수정 보완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③ (X) 점증모형은 보수적·임기응변적 성격이 강해 혁신성이 결여됩니다.

④ (O) 점증모형에서는 적절한 조정과 타협을 통해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는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합니다. 조금씩 수정하다 보니 목표와 수단의 구분이 곤란합니다. 목표에 따라 수단이 바뀔 수 있지만, 수단에 따라 목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답: ③

07.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적 국가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계획으로 단년도 예산편성의 기본틀이 된다.
②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 사전에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각 중앙부처는 그 한도 내에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한다.
③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배제될 수 있도록 예산배분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해설>

① (O)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당해 연도를 포함해 향후 5년을 대상으로 재정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 매년 연동계획을 통하여 수정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년도 예산편성과 연계시키려는 노력으로 2004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습니다.

② (O)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③ (X)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를 통하여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투자우선순위, 재원조달방법 등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통해 사업의 추진여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함으로써 대형 신규 사업의 신중한 착수(예산낭비 방지 등)와 재정운영 및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배제 X).

④ (O)「국가재정법」제50조

> 「국가재정법」
>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답: ③

08. 현대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직군생태론은 단일조직을 기본 분석단위로 하며, 환경에 대한 조직 적합도에 초점을 둔다.

② 거래비용이론은 자원의존이론의 한 접근법으로, 조직 간 거래비용보다는 조직 내 거래비용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

③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독립변수를 한정하고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화해 중범위라는 제한된 수준 내의 일반성과 규칙성을 발견하려고 한다.

④ 대리인이론에 따르면 정보의 대칭성과 자산 불특정성이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며, 주인-대리인 관계는 조직 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해설>

① (X) 조직군 성태론은 조직군을 기본 분석단위로 합니다(단일조직 X).

② (X) 거래비용이론은 조직경제학의 한 접근법입니다(자원의존이론 X). 거래비용이론에서 조직의 목표는 환경에서 자원을 교환하는 데 드는 비용과 조직 내에서 교환을 관리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③ (O)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상황변수를 유형화시키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반성과 규칙성의 발견을 추구합니다.

④ (X) 대리인이론의 효율성 제약요인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기회주의적 행동, 자산특정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주인-대리인 관계는 조직 내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답: ③

09.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접근모형에서는 일반 시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관료집단이 주도한 의제가 정부의 홍보활동을 통해 공중의제로 확산된다.

② 동원모형은 정치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사회문제가 바로 정부의제로 채택되며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 부문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자주 볼 수 있다.

③ 외부주도형은 이익집단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가 여론을 형성해 공중의제로 전환되며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체제에서 자주 볼 수 있다.

④ 공고화모형에서는 이미 광범위한 일반 대중의 지지가 있는 경우에, 정부는 동원 노력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지지를 그대로 공고화해 의제를 설정한다.

<해설>

① (X) 동원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부접근형에서는 공중의제화 과정이 없습니다.

④ (O) 공고화형은 대중지지가 높고 국가가 논쟁을 주도하는 유형입니다. 민간집단의 광범위한 지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하여 정부 내 최고의사결정권자들이 주도하여 지지의 공고화(consolidation)를 추진합니다.

답: ①

10. 재정준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채무준칙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채무 규모에 상한선을 설정한다.

② 재정수지준칙은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설정되므로 경제 안정화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③ 재정지출준칙은 경제성장률이나 재정적자 규모의 예측에 의존하지 않는다.

④ 재정수입준칙은 조세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풀이의 핵심>

○ 재정준칙

-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규율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구체적인 재정운용 목표로 재정 규율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제도임
- 재정총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수량적 제한'을 함
- 구분: 수입준칙, 지출준칙, 재정수지준칙, 채무준칙

<해설>

① (O) 국가채무준칙은 국가채무의 규모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준칙입니다. 국가채무의 한도 설정은 절대규모가 아니라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로 설정됩니다.

② (O) 재정수지준칙은 매 회계연도마다 또는 일정 기간 재정수지를 균형이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준칙입니다. 재정수지준칙은 경기변동과는 무관하게 설정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수지 준칙이 경제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재정수지 준칙은 GDP 대비 몇 퍼센트와 같은 형태로 명목재정적자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고정적인 목표는 경기가 과열되어 있을 때나 경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을 때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인 재정적자 목표치의 설정으로 연결됩니다.

③ (O), ④ (X) 재정지출준칙은 총지출 한도, 분야별 명목·실질 지출한도, 명목·실질 지출 증가율 한도를 설정하는 준칙입니다. 지출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며, 경제성장률이나 재정적자 규모의 예측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재정수지 준칙은 예상되는 재정적자의 수준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기반해서 세수입의 증가를 과다하게 예측하는 동시에 세출의 증가를 과소하게 예측하면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재정수지의 목표치가 달성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재정지출 준칙하에서는 지출한도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지출한도를 넘긴 부처가 직접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지출준칙은 지출에 초점을 맞추기는 하지만, 재정지출 준칙이 세입정책과 독립적으로 설정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출한도를 준수하는 대신 조세지출을 광범위하게 활용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재정지출을 준수하지만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답: ①

1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보직 관리 범위를 제한하여 공무원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② 직위분류제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직무 중심의 동기유발이 가능하다.
③ 계급제는 공무원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고 직업공무원제도 확립에 유리하다.
④ 직위분류제는 직무 한계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해설>
① (X) 계급제는 일반행정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맡게 하여 공무원의 시야와 이해력을 넓혀 부서 간·부처 간 협조와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②, ④ (O) 직위분류제는 하나의 직무에 장기간 근무하게 하여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고 직무의 내용과 수준이 명확하여 권한과 책임의 명확합니다.
③ (O)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대개 폐쇄형의 충원체제를 유지하여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합니다.

답: ①

12. 선발시험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하나의 시험유형 내에서 각 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종합하여 시험의 일관성을 검증한다.
② 시험성적과 본래 시험으로 예측하고자 했던 기준 사이에 얼마나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검증한다.
③ 시험을 본 수험자에게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게 하여 두 점수 간의 일관성을 확인한다.
④ 문제 수준이 비슷한 두 개의 시험유형을 개발하여 동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게 한 후 두 집단의 성적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해설>
신뢰성을 일관성을 의미합니다.
① (O) 하나의 시험유형 내에서 각 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종합 → 문항 간 일관성 검증방법
② (X) 시험성적과 본래 시험으로 예측하고자 했던 기준 사이의 상관관계 → 기준타당도
③ (O) 시험을 본 수험자에게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게 함 → 재시험법
④ (O) 문제 수준이 비슷한 두 개의 시험유형을 개발 → 동질이형법

답: ②

13.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가 비정형적일 때 유용하다.
②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③ 책임소재가 명확하여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작다.
④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내 전문 능력이 있는 구성원들을 연결하는 구조이다.

<해설>
①, ②, ④ (O) 애드호크라시는 다양한 전문적 기술을 가진 비교적 낯선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며, 문제 중심으로 조직된, 변화가 심하고 적응력이 강하며 임시적인 하나의 체제입니다.
③ (X) 애드호크라시는 상하 구분,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 모호성이 존재하여 갈등발생이 불가피합니다.

답: ③

14.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면평정법은 상급자, 동료, 부하, 고객 등 다양한 구성원에게 평정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
② 목표관리제 평정법은 참여를 통한 명확한 목표의 설정과 개인과 조직 간 목표의 통합을 추구한다.
③ 강제배분법은 평정치의 편중과 관대화 경향을 막기 위해 등급별로 비율을 미리 정해 놓는다.
④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근무성적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므로 평정자의 편견이 개입할 가능성이 작다.

<해설>
④ (X)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평정 요소에 대한 등급을 정한 기준이 모호(ex 우수, 매우 우수)하여 등급 간 비교 기준이 명백하지 않고 평정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평정자의 편견이 개입할 가능성이 작다 X).

답: ④

15. 행정책임 확보 방안 중 내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공정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하는 시민단체 활동
② 부정청탁금지법 제정과 같은 국회의 입법 활동
③ 부당한 행정에 대한 언론의 감시 활동
④ 중앙부처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관리 활동

<풀이의 핵심>
통제자가 '행정조직 내부'에 위치하면 내부통제이고, '행정부 외부'에 위치하면 외부통제입니다.

<해설>
① 시민단체, 국회, 언론은 외부통제입니다.
② 기획재정부의 관리 활동은 내부통제입니다.

답: ④

16. 넛지(nudge)의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넛지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을 선택설계라고 한다. ㄴ. 정책대상집단의 행동에 개입하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한다. ㄷ. 넛지는 디폴트 옵션 설정 방식처럼 사람들의 인지적 편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수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풀이의 핵심>
○ 넛지이론
- 실제의 인간 행동에 관한 행동경제학의 통찰을 정부의 정책 설계 및 집행에 적용·응용하기 위한 이론
- 행정적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에 관한 규범적 근거와 이에 적합한 정책 수단을 제시

※ 행동적 시장실패: 인지적 오류와 행동 편향으로 인한 비합리적 의사결정

- 신고전학파 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의 비교

구분	신고전학파 경제학	행동경제학
인간관	• 완전한 합리성 • 완전한 이기성 • 경제적 인간	• 제한된 합리성, 생태적 합리성 • 이타성·호혜성(사회적 본능, 사회적 선호) • 심리적 인간
의사결정 모델 (선택행동이론)	• 효용극대화 행동 • 기대효용이론(효용함수)	• 만족화 행동, 휴리스틱 • 전망이론(가치함수)
연구방법	가정에 기초한 연역적 분석	실험을 통한 귀납적 분석
정부 역할의 근거와 목적	• 시장실패와 제도실패 • 재화의 효율적인 생산·공급	• 행동적 시장실패 • 바람직한 의사결정 유도(행동 변화)
정책 수단	법과 규제, 경제적 유인 수단	넛지(선택설계)

<해설>
ㄱ. ㄴ. (O) 넛지는 원래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라는 뜻으로 탈러와 선스타인은 이를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는 행동경제학의 용어로 만들었습니다. 넛지는 행동경제학이 발견한 인간의 행동 메커니즘을 정책에 응용한 것입니다. 넛지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을 선택설계라고 합니다. 바람직한 결과를 위한 선택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ㄷ. (O) 넛지의 핵심은 환경 조건을 디자인하는 '선택 설계자'와 재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설정되는 기본값인 '디폴트 옵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 기증의 디폴트 옵션을 동의로 정한다면, 이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 전까지는 장기 이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디폴트 옵션을 부동의로 정했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장기 기증률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답: ④

17.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스키너(Skinner)의 강화이론은 인간의 내면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며, 행동의 결과보다 원인을 더 강조한다.

②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강력한 동기유발을 위해서는 추상적인 목표를 채택해야 한다.

③ 포터(Porter)와 롤러(Lawler)의 업적·만족 이론은 직무성취수준이 직무 만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④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이론은 공공부문 종사자와 민간부문 종사자의 가치체계는 차이가 없고, 개인이 공공부문에 근무하면서 공공봉사 동기를 처음으로 획득하므로, 조직문화와 외재적 보상을 강조한다.

<해설>

① (X) 스키너의 강화이론에서는 행동의 결과를 조건화함으로써 반응행동(responses)을 유발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행동의 결과를 강조합니다.

② (X) 로크의 목표설정이론은 목표가 도전적이고 명확할 때 인간은 더욱 노력하게 된다고 봅니다.

③ (O) Porter와 Lawler는 보상이 적절하면 높은 수준의 근무성과(업적)가 만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④ (X) 공공봉사동기이론은 공공부문 종사자는 민간부문 종사자와 차별화되는 공직동기를 가진다고 가정하면서, 동기부여 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과급과 같은 외재적 보상을 통해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려는 신공공관리론 개혁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답: ③

18. 지방자치에 관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터슨(Peterson)의 저서『도시한계(City Limits)』에 따르면, 개방체제로서의 지방정부는 재분배정책보다 개발정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② 라이트(Wright)는 정부 간 관계를 분쟁형, 창조형, 교환형으로 분류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사회적·문화적 측면의 동태적 관계를 기술하였다.

③ 로즈(Rhodes)의 정부 간 관계론은 지방정부가 조직자원과 재정자원 측면에서 중앙정부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본다.

④ 티부(Tiebout)의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feet)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성,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외부효과 존재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해설>

① (O) 피터슨의 도시한계론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이동성에 대한 통제가 어렵고,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지방정부는 생산적 노동과 자본을 유입시키는 개발정책을 지향하지, 이들은 유출시키고, 빈민 등을 유입시키는 재분배정책은 지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터슨이 도시한계론에서 주장했던 복지의 자석효과에 따르면 복지서비스 수준의 격차에 의해 복지수급자의 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복지서비스가 좋은 지역에 저소득자가 많이 유입되고, 편익보다 부담이 커지는 고소득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지방정부가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지방정부가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X) 라이트의 정부간 관계모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관계 및 기능적 상호의존관계를 기준으로 정부간 관계를 분리형, 내포형, 중첩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③ (X) 로즈(Rhodes)의 전략적 협상 관계모형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하여 재정적 자원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을 제정하는 법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지방정부는 현장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현장에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재정자원은 중앙정부가 우월한 지위).

④ (X) 티부모형의 전제는 외부효과의 부존재(존재 X)입니다.

답: ①

19. 정책학의 발전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드로어(Dror)는 정책결정의 방법, 지식, 체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책결정체제에 대한 이해와 정책결정의 개선을 강조하였다.

② 정책의제 설정이론은 정책의제의 해결방안 탐색을 강조하며, 문제가 의제로 설정되지 않는 비결정(nondecision making) 상황에 관하여는 관심이 적다.

③ 라스웰(Lasswell)은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보다 정책에 필요한 지식이 더 중요하며, 사회적 가치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④ 1950년대에는 담론과 프레임을 통한 문제구조화에 관심이 높아 OR(operation research)과 후생경제학의 기법 활용에는 소홀하였다.

<해설>

① (O) 드로어는 1968년도와 1971년도에 세 권의 중요한 책을 잇달아 발표하여 정책학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정책학의 목적은 정책결정체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며, 정책학은 보다 구체적으로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한 방법, 지식, 그리고 체제(system)에 직접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② (X) 무의사결정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의사결정은 엘리트 자신의 이익과 상충되는 도전과 주장을 적극적으로 좌절시키는 의도적 무결정(현상유지적 비결정)을 의미합니다.

③ (X) Lasswell은 1951년 '정책지향'이라는 논문에서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지적하였습니다.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정책과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로 얻은 실증적 지식)과 정책에 필요한 지식(정책과정에 대한 처방적·규범적 지식, 정책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지식)입니다(정책과정에 관한 지식보다 정책에 필요한 지식이 더 중요 X). 라스웰은 정책연구의 필요성을 궁극적으로는 인간 존엄성의 실현과 확보에 두고 현실적으로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과정의 합리화를 제고시키는 지식제공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회적 가치는 사회구성원들의 권리, 자유, 권한, 기회, 그리고 소득이나 재산 등과 관련된 가치들을 의미합니다.

④ (X) 1950년대 정치학계를 휩쓸었던 행태주의는 과학적·실증적·경험적 연구방법을 특징으로 하고 정확한 계량화를 중요시하였습니다(OR과 후생경제학의 기법을 활용 소홀 X).

답: ①

20. 현행 지방세의 탄력세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세 일부 세목의 세율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ㄴ. 레저세, 지방소비세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ㄷ. 조례로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에 대해 표준세율의 50%를 가감하는 방식과 같이 일정 비율을 가감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풀이의 핵심>

○ 탄력세율 제도

- 법률의 위임을 받아 법집행상 지방정부에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지방세액 산정 시에 적용하는 세율을 세법상 정해진 세율(기준세율 또는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한 제도
-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음
- 탄력세율 적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력세율 세목	담배소비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조례로 정하는 탄력세율 세목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일부,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탄력세율 적용 제외	지방소비세, 레저세

<해설>

ㄱ. (O) 탄력세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ㄴ. (O) 레저세, 지방소비세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ㄷ. (X)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에 대해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제136조(세율) ①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답: ②